

민주노총 6월 노동청 필리버스터 문안

1. 필리버스터 개요

-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1인시위 및 필리버스터 의제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 노동부 규탄 및 중단요구,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신속수사 및 엄정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현업 고시 확대 개정임.
- 단위 사업장이나 직종의 실태를 반영한 현장 발언을 우선적으로 진행
- 공통문안을 참조하여 진행

2. 필리버스터 문안

○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 노동부 규탄, 즉각 중단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가 전방위적으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책무도 저버리고 전면적인 후퇴와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는 그 후퇴와 개악을 뒷받침하고, 오히려 앞장서는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도 모자라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비롯한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이 노동자 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과로로

노동자도 죽고, 시민도 다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폐지 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은 팽개치고, 노동조합 말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당한 화물노동자의 단체교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마트나 유통매장이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는 것이 의무휴업일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가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쉴 권리, 온라인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온라인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이 후퇴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이

법 대로 주당 52시간 일하고, 법을 지키며 안전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50여명의 타워 기사를 징계하고, 그중 20여명은 기사 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험작업은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장비가 위험하면 먼저 점검하고 일하겠다는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타워기사 노동자 면허 취소를 강행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노동부입니다. 안전작업을 위한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현장 활동에 ‘법적으로는 세부 기준이 없다’며 법령 해석으로 국토교통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강풍에 작업을 강요받아도, 위험해서 신호수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장비가 이상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모두 타워기사 면허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활동을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을 내세워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으로 해마다 400명, 500명이 죽어 나가는 건설 현장. 40명, 38명 건설노동자가 폐죽음을 당해도 건설기업을 구속도 처벌도 하지 않았던 것이 노동부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안전을 위한 활동 탄압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으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갑니다

지난 5년간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로 죽어 나간 노동자가 2,500명이 넘습니다.

2021년에는 565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노동자 시민이 분노했던 파리바게뜨 노동자 사고사망에는 12시간 맞교대 노동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압축 노동은 사고,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당뇨에 이르기 까지 노동자 건강을 파괴합니다.

선거전부터 120시간 노동을 운운하던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80시간 일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발표했습니다. 거센 저항에 부딪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을 이야기 하며 또 다시 노동자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기구인 ILO가 정한 최대 노동시간 상한은 주당 48시간입니다.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

니다. 홍보 부족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여론조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매년 500명이 넘는 최악의 과로사망. 통계도 제대로 없는 과로자살. 그 어떤 부처보다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노동부가 노동시간 개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죽어야 합니까.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으로 최고 책임자 처벌을 막아줍니다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로 도로위 시민안전을 팽개칩니다

마트 의무 휴업일 후퇴로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빼앗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후퇴로 건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악을 폐기하라

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개악 추진 노동부 규탄. 즉각 중단

10만원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노동자들이 용광로에 빠져 죽어 나갑니다

가스가 새는 2만원짜리 용접호스를 바꾸지 않아 폭발사고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갑니다.

무법천지 현장을 바꾸기 위해 진짜 사장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재벌 대기업을 위해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무는 줄이고, 처벌은 낮추는 법 개악안을 6월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이상의 형사처벌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처벌을 도입해서 반복적인 중대재해만 형사처벌로 가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50인미만 기업의 적용 유예를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TF를 만들어 개악을 계속 추진하자 경영계는 더 강력히 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2명이상 사망사고만 적용하고, 안전담당 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법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026년이나 해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경총의 요구대로 하면 대전 아울렛 참사와 같이 소방법을 위반한 중대재해는 중대재

해처벌법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 지키면 SPL 사망사고와 같은 2인1조 작업 위반은 처벌에서 빠져나갑니다. 사고사망의 80%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또 다시 대상에서 빠져나가, 중대재해 감소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줄어들던 산재사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 여러분의 사고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철도, 도로 붕괴,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 가슴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 수 백명의 시민이 죽어도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안전투자를 하던 기업은

이제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시민이 수 십년 싸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법 개악에 노동부가 선두에 서서 6월말까지 개악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수 많은 법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처벌에 대한 개악만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의 예방 노력 전체를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한 묶음으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 처벌 조항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과 연동시키겠다고 합니다. 산업법 개악이 추진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징계, 해고를 남발하게 됩니다. 노동자 탓으로 돌리면서 경영책임자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둘째, 구의역 참사부터 김용균 노동자 죽음까지 수많은 하청 노동자의 죽음으로 일부 도입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 책임강화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조선업 같이 다단계 하청으로 내려가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서 빠져나갔던 행태를 다시 법으로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서 처벌을 하는 조항은 축소하고, 처벌 없는 규정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락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방호장치 등의 세부 기준은 회사가 맘대로 정하면 됩니다. 회사가 정한 안전난간 기준만 정하면 추락조치는 한 것으로 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대폭 축소시켜 주게 됩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은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켰던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라는 요구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인 무법천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법령이 노

동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지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 수사 기소 촉구 엄정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해에만 230여건에 달하는 법 적용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2023년도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는 수십건에 불과합니다. 430명이 넘게 죽어 나간 현대중공업에서 작년에 2명이 또 다시 죽어나갔지만, 아직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몇건 되지도 않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있었던 압수수색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구속 수사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도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수사 핑계만 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현장개선을 하겠습니까. 수 백건의 법 적용 중대재해에 검찰이 기소한 것은 17건에 불과하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1건은 집행유예이고, 반복적으로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도 1년의 실형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주일 내외로 진행되던 노동부 감독은 수개월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감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사고조사나 감독의 참여 보장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비공개로 감독은 몇 달뒤에 하는데 그 어떤 기업이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을 개선하겠습니까. 사업장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떤 기업이 사회적 압박을 받겠습니까. 아직은 진행형인 법 개악보다 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중대재해 수사, 감독 행태입니다. 이렇게 수사와 감독이 진행되다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가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잘못된 수사와 감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반성과 개선은커녕, 경영계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법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개악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노동부의 행태가 참으로 기가막힐 일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고조사에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사망 사고에는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학교) :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특수실무사, 과학 실무사, 도서관 사서, 수상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안전교육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는 근거도 없는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법 적용 확대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종 중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직종은 3개 직종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 확대 개정 검토가 6월 말까지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산안법 개악 등 후퇴와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업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개선요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차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즉각 확대하라

<특수교육 실무사>

학교 현장에는 장애 학생의 학습, 등하교, 급식 등 학교생활 모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실무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의 등교, 하교 때는 수 십 키로 휠체어를 들고 내리고, 휠체어나 보조기에 끼이거나 부딪쳐서 다치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과학, 체육, 음악, 급식 등 이동을 해야 할 때는 키도 체격도 더 큰 학생들을 부축하거나, 들어서 옮기고 있는데. 일반 학교는 한 학교당 1명만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이 다 지원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학생, 뇌병변, 발달장애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 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학생들을 돌보면서 돌발행동으로 인해 맞거나, 꼬집히거나 물리거나 폭언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예방도 전혀 없고, 일하다 다친 것인데도 산재 보상조차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멍 들고 상처가 나는 것은 다반사이고, 10바늘 넘게

꺾메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특수 실무사 노동자 중에서 일하다가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70% 가까이 되지만,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는 3.3%에 불과합니다. 사고성 재해나 직업병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할 의지가 있다는 노동자는 80%이지만, 학교에서는 산재 신청과 보상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특수실무사는 산안법의 현업고시 직종이 아니어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재보험법에서 학생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교육이 없으니, 학교에서 수 차례 이런 일이 발생해도, 특수실무사 노동자들은 내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이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조선업 노동자 보다 심각하다 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실무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1주일 이상 통증이 있다는 노동자가 80%에 달합니다. 국제적으로나, 한국에서도 병원의 간호사 노동자, 요양보호사 노동자 모두 환자나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매우 심한 직종입니다. 특수교육 실무사 노동자도 비슷한 노동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특수학교 실무사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나 개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적용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현업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니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수실무사 노동자들은 그 어떤 직종보다 학생, 학부모에 대한 감정노동의 위험에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특수실무사 노동자들은 산안법 현업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감정노동 메뉴얼도 없고,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교육도 전혀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특수교육실무사 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노동자가 1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특수교육 실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노동자가 100%입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에 특수교육 실무사를 포함하여 즉각 직종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의 후퇴와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과학실무사>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과학실험 실습을 하면서 발생한 폭발사고, 화상사고가 수 없이 많습니다. 수은이 누출되어 전교생이 대피하기도 하고, 폭발로 4명이 화상을 당하고 1명은 각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실험준비물인 드라이 아이스가 튀어올라 한쪽눈이 실명을 당하기도 했고, 과학준비실 청소중에 에탄올통에 불꽃이 튀어 전신화상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고등학교 과학실험 중에 폭발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10여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하면서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법으로 위험하다고 규정된 화학물질만 초등학교는 14가지, 중학교는 30여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있는 과학실에서 실험 준비 지원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학실무사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과학실 안전을 위한 각종 매뉴얼은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직접 하는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은 산안법 현업고시에서 적용 제외되어 안전교육도, 특수건강진단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에 화학약품, 재료, 기구, 설비 등을 준비, 관리하고 과학실험을 지원하는 노동자입니다. 학교에서 화학물질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이 일하는 준비실에 각종 화학물질이 넘쳐납니다. 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화재 같은 대형 사고도 발생하지만, 화학물질은 장기간 몸속에 쌓여 직업병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은 십 수년 일하면서 화학물질을 다루면서, 암이나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고 있지만 예방이나 보상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매뉴얼도 없습니다. 각종 화학실험, 연구실에 대한 안전법령이 속속 강화되고 있는데, 학교의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은 산안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에 즉각 적용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사서, 수상안전요원>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수십 권, 수 백권의 책을 높고 낮은 책장에 정리하고, 매일 같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최초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안전과 건강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서 노동자들은 도서 관리 업무를 하면서 감정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현업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안전조치 보건 조치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사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본인이나 동료가 업무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노동자가 93%나 되었고,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경험했다는 노동자도 74%나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서관 사서업무가 안전교육이나 산보위 참여에서 배제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생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별도의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수영 교육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영장을 개방 할 때는 수상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수영장에서 일하면서 미끄러짐 사고등 빈번하게 다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하면서 각종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낡거나 녹슨 수영장 설비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등의 감정노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에 대한 학교의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도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습을 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철저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 년 동안 수도 없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최소한의 개선 조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도서관 사서 노동자, 수상안전요원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업고시 대상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더 이상 학교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서 노동자의 수상안전요원 노동자의 산안법 현업고시 적용확대로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공공행정)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수도 점검, 농기계 수리. 보건소, 도서관 사서, 방문 간호등 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안전교육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는 근거도 없는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법 적용 확대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종 중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직종은 6개 직종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 확대 개정 검토가 6월 말까지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산안법 개악 등 후퇴와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는 현업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개선요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즉각 확대하라.

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수도 점검>

- 노동자 시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수도 계량기 점검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수도점검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담당 구역의 계량기 작동상태를 확인, 이물질 제거하고, 점검을 입력하고, 불량한 계량이나 도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의 계량기는 20키로 내외의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안에 들어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는 계량기로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맨홀 안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어 해마다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가 지역의 경우는 상 하수도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가스에 노출되소, 맨홀 안에 들어가기 위한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다치고, 질식사고가 발생 합니다.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 있는 계량기 안에서 동물 사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살아 있는 뱀이 있는 경우도 너무도 많아, 뱀이나 벌레 혹은 개에게 물린 경험이 없는 수도점검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외딴 지역에서 혼자서 수도점검을 하던 여성 노동자가 성폭행과 살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수도점검 작업의 사고 위험성은 정부 자지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원격점검 도입의 이유로 점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점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장구인 안전화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도점검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 2022년 서울시 수도점검 노동자 350여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2만5천

보를 견고, 1명당 월평균 검침하는 수전은 3,100개로 하루에 221개를 검침하고 있었습니다. 수 많은 건물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는 수도관위의 수 십 키로 철판과 맨홀 뚜껑을 열고 옮기면서 발이 끼이는 사고는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폭염, 미세먼지, 폭우 속의 위험작업이 진행되고,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골절되는 사고도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행정 노동자들이 그러 하듯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량기 검침을 하는 일이므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폭언, 폭행도 다반사입니다.

-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근골격계 질환, 폭언 폭행등 수도검침 업무가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정부 지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화 하나 지급하는 것도 노동부에 질 의해야 할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전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도검침 노동자의 안전화 지급을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수도검침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검토 시한이 6월말입니다. 현장의 실정이 이러한데도 노동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어찌니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나 몰라라 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라 노동부 고시를 확대 개정하는 것이어서 그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노동부는 즉각 수도검침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산보위 참여, 산안법 전면 적용을 위해 현업고시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간호>

-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소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 치료, 예방조치, 물리치료, 상담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최일선에서 몇 년 동안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때 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년 그렇게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그 누구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 감염성 질환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인데, 보건소는 공공행정이라는 탁상행정식 구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방문간호를 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간호사는 만성 질환자, 기초 수급자, 어르신 등과 같이 건강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일일이 방문해서 합병증 예방관리나 건강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자지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제도로 건강관리,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섯개 일곱 개 가구를 방문하며 정신없이 일하면서 이동 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방문가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됩니다. 개에게 물리거나, 방문 고객에 폭언,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애완견이나 큰 개를 키우는 가구가 많아 물리거나 공격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방문하면서 성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뛰쳐 나오기도 합니다. 방문 가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각목을 들고 나와 피해 도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노동 매뉴얼도 교육도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 폭염이나 폭설, 폭우에 일하면서 미끄러져 발목이나 팔목 골절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상이변이 있을 때 방문 노동을 중단하는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못에 찢려 파상풍에 시달려도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노동자 스스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역주민이 의뢰한 가구 방문의 경우 결핵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해 결핵이나 감염병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품과 방문 가방을 하루종일 들고 다니면서 만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콜 센터, 상담, 도서관 사서, 체육시설 노동자>

전화로 안내, 상담, 접수 처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입니다. 코로나 -19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났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칸막이 하나로 나뉘어져서 하루종일 전화 상담과 컴퓨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환기도 안되는 사무실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책상에서 하루종일 말을 하면서 일하는 작업이라 코로나 -19에 집단적으로 감염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감염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실적 압박에 휴식도 없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고 일해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를 안내하는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자긍심은 커녕 폭언, 협박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오히려 공공행정이라며 안전교육도, 감정노동 교육이나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가 잘못되거나, 미흡한 모든 원성으로 공공행정분야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 협박은 훨씬 강도가 셉니다. 정부 지자체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육반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들의 최소한의 현장 개선 요구도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자던 노사간의 협의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공공행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며 날라가 버렸습니다. 정부 지자체에는 콜 센터 외에도 다양한 상담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또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간기업은 법을 적용하고, 공공부분은 탁상행정으로 오히려 적용제외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장서관리, 컴퓨터 작업, 도서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도서관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욱 강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건강센터,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장비에 끼이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감정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예술, 체육 등 여가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산업법 현업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수리, 주차단속 등 각종 단속 업무>

농촌 지역의 지자체에는 농업용 기계를 임대, 수리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계 장비 수리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업무입니다. 고장이 난 장비를 수리하는 것이니 톱날, 회전 장비 등에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고, 수리 정비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커다란 농기계의 경우에는 출장, 이동 수리를 하기도 하고, 커다란 농기계를 들어 올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동 정비 수리 센터>를 하기도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농기계 임대 수리를 하는 노동자는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업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매일 도로에 나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차량 사고의 위험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단속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마찰이나 위협도 매우 심각하게 노출됩니다. 주정차 단속원 바로 앞까지 차로 급 브레이크로 위협을 하거나, 단속시에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어 위협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속을 받은 민원인이 자기차에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오지말라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원응대를 할 경우에도 온갖 막말과 욕설을 듣습

니다. 부당한 민원인의 요구에도 노동자들이 무조적 사과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하루종일 육떡으려서 일하다 보면 자괴감도 느끼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전화 상담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폭염시기나 폭우에도, 폭설과 한파주의보가 내려도 민원이 제기되면 무조건 나가서 단속해야 합니다, 원래 단속권한은 저희와 같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동행해서 현장을 나가지만 실제적인 단속 업무와 그 위험은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어야 합니까.

- 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국방행정, 사회보장 행정 등 수 많은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행정에서 그나마 현업고시로 적용되는 시설 관리, 청소, 급식 등과 같은 업무도 국방행정이 적용되는 군부대로 오면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 기업이나 학교, 정부 지자체에서 갑자기 위험이 사라집니까 >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입니다. 사무직이나 행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이 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야 합니까? 수도검침, 농기계 임대 수리, 보건소, 콜 센터 등등 수많은 위험작업이 민간기업에서는 법을 전면 적용하고, 공공행정이라고 왜 제외되어야 합니까?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지속되서는 안 됩니다. 6월 말까지 검토 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개정해야 합니다. 공공행정 뿐 아니라 국방행정, 사회보장 행정등 아무런 근거없이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철폐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법 개정애 나서야 합니다.